



기획

Special Article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 정책 | 남궁은하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화를 위한 독일의 지역사회 정책 | 세바스찬 메르켈, 헨리케 랭거

미국의 고령친화 지역사회 정책 | 최연진

싱가포르의 아동 권리와 아동친화적 스마트 도시 | 이정음

일본의 배리어프리 관련 도시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건축·도시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 전성민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화를 위한 독일의 지역사회 정책¹⁾

Healthy and Active Aging in German Communities

메르켈, 세바스찬 (보훔루르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랭거, 헨리케 (보훔루르대학교 사회과학부 연구원)
Merkel, Sebastian · Langer, Henrike (Ruhr-Universität Bochum)

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변화를 해결하고 시민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 협력과 재정 자원이다. 그러나 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과 비공식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더 강조된다. 계획의 이행 과정에는 지역복지협회 대표, 시민, 행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그 결과, 협력적 통합사회공간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책임감 있는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고령화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의 중심에서 시민이 자기 결정권이 있는 노후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들어가며

독일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고령자 및 초고령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연령 구조대로라면 고령자 수가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7세 이상 인구는 1990~2018년 사이에 약 1,040만 명에서 1,590만 명으로 늘었으며, 이미 5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67세 이상 인구는 2039년까지 500만~600만 명이 추가로 증가해 최소 2,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60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2018년 기준 20~66세 생산가능인구는 5,180만 명이며, 203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1) 이 글은 저자가 영문으로 작성한 'Healthy and Active Aging in German Communities'를 번역한 것이다.

4,580~4,740만 명으로 현재보다 400만~600만 명이 감소할 것이다(Destatis, 2022).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 수 있도록(age in place)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담론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예상 결과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여러 조치와 정책으로 이어졌다. 그 예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와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개입을 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개입은 삶의 공간이 고령자뿐만 아니라 고령화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통찰에 기반을 둔다(Wahl & Gerstorf, 2020). 주변 환경이 고령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고령자 또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는 고령자의 건강과 행복, 정체성, 자율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Oswald & Wahl, 2019; Wahl & Gerstorf, 2020; Wanka & Niedoba, in press). 이러한 배경에 기반을 둔 것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접근법이 있다. 반카와 니에도바(Wanka & Niedoba, in press)는 세 가지 지역사회 접근법, 즉 고령 친화 도시, 스마트 도시, 치매 친화 도시를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통합사회계획(integrated social planning)을 강조한다. 통합사회계획 접근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인구 대표들의 학제 간, 협력적 협업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중요 국가 목표 및 지침을 소개하고, 협력적 통합사회계획(cooperative integrated social planning)의 역사적 유래를 간략히 설명한 후, 동네(neighborhoods/Quartiere)라고 하는 지역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2. 연방 목표 및 지침

2012년 국가 차원의 인구통계학적 전략으로 도입된 ‘모든 연령이 중요하다(Every age counts)’ 캠페인은 2015년 ‘전 세대의 부와 삶의 질 향상(More wealth and quality of life for all generations)’ 캠페인으로 발전했다(Bundesregierung, 2017). 해당 전략에는 네 가지 행동 영역인 경제 성장 잠재력 강화, 사회적 결속 증진, 지역의 평등한 생활 여건 촉진, 정부 실행력을 위한 건전한 재정 보장이 포함된다.

인구통계학적 전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소위 ‘돌봄 공동체(caring communities)’라는 것이 있다(Siebte Altenberichtscommission, 2016). 독일의 고령 친화 역사사회에 대한 논의에서는 먼저 건축 환경(예: 보도 연석의 높이 조절)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

중하고, 다음으로 사회 및 건강 관련 측면을 고려한다.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서는 『제7차 연방정부 노년층 보고서(Seventh Elderly Re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이다. 보고서에서는 ‘돌봄 및 돌봄 업무 설계’(Siebte Altenberichts-kommission, 2016, p. 194)를 촉구하고, 돌봄 공동체 지침의 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principles of subsidiarity)과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제시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지역 수준에서나 동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충성은 이해 당사자에게 결정 권한이 위임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관료 행정을 줄임으로써 국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과학연구 개념인 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welfare mix)은 복지국가 외에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복지 생산자들, 즉 시장(기업), 자원봉사 부문(자선단체, 비영리), 비공식 부문(가족, 친구)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계획 대상 집단에 국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3. 공공 서비스와 지자체의 책임: 통합사회계획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도시사회계획(urban social planning)에 대한 현재의 접근법이다. 이는 사회 사업의 구상과 실행에 시민, 지역복지협회 대표자, 행정 및 정치 관계자를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Rosenkranz, 2011). 통합사회계획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독일에서 시행된 노인돌봄계획(geriatric care planning)에 기원을 두고 있다. 노인돌봄계획은 지자체 당국의 연령별 인프라 특화 행정계획(공공행정)에 중점을 두었다(Schubert, 2019). 이 시기는 절차 수립의 계층적 관리와 지자체 관료 체계의 독점을 특징으로 한다.

1990년대 초 독일에서 신공공 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소위 노인계획(geriatric planning)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공공 관리는 슈베르트가 ‘관리 논리(management logic)’로 설명하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지자체가 비용 관리와 성과 평가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용-성과 회계, 관리, 예산 책정 등의 비즈니스 관리 전략 및 도구가 지자체 관리에 점차 도입되었다(Schubert, 2019). 이와 같은 조치는 복지협회 같은 노인 돌봄 분야의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공공행정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독자적인 서비스 제공 업체는 지자체의 계약자(대리인)이다. 이들의 임무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공공행정 업무를 계약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본인(principal)’이라고 하는

통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초로 문서화 및 보고 시스템을 수립했다. 이 관계를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관계라고도 한다(Preisendörfer, 2005).

노인돌봄계획과 달리 고령자를 위한 지자체계획에서는 책임 영역의 변화가 나타났다. 지자체 계획은 점차 도시개발계획뿐만 아니라 교육 및 보건 분야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Blaumeiser, Blunck, Klie, Pfundstein, & Wappelshammer, 2002). 이러한 변화는 1994년 사회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더 강화되었으며, 요양시설이 현재의 장기요양 보험기금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자체계획의 책임에서 노인 돌봄이 상당 부분 배제되었다. 이 같은 변화의 목표는 요양서비스 제공 업체 간 경쟁을 강화하여 자율 규제, 질 높은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VSOP/Verein für Sozialplanung, 2015).

이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지자체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새롭게 포함되었다(Rohden & Villard, 2010).

1. 지역사회 개발 계획
2. 요양시설의 지역 수요 계획 및 네트워킹
3. 사회생활에서의 자립심과 참여를 지원하는 고령자 지원 조항(old age assistance paragraph)의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여러 조치와 서비스 수립

그러나 고령자 지원 조항은 직접적으로 지자체가 고령자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며, 대신 이 영역에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기반을 제공한다(Rohden & Villard, 2010). 이러한 조치는 예방적 성격일 수 있으며, 고령자의 자원과 구체적인 생활 여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개별 연방 주들이 최신 의료법을 도입한 후에야 지자체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Schubert, 2019).

「제3차 요양강화법(Third Care Strengthening Act, PSG III)」 도입과 더불어 돌봄 인프라와 관련한 지자체의 관리 역량이 더욱 확대되었다. 지역 돌봄 상담,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하고 접근성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의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다. 여기에는 돌봄 조언 등의 자문 서비스와 적합한 주택 공급이 포함된다(Kricheldorf & Oswald, 2015). 지역의 돌봄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연방 주에 의해 돌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3차 요양강화법」에 따라 요양보험기금이 지원된다. 돌봄위원회

는 요양 문제를 다루고 이에 따른 권고안을 작성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기금은 지역 구조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Schubert, 2019).

위에서 설명한 법률 조정안의 결과, 사회계획은 점점 더 전략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서비스 범위와 성과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수요를 기반으로 적합한 대상을 선별하고 더 경제적인 방식으로 여러 제안을 마련할 수 있다. 협력적 통합사회 계획은 고령자를 위한 지자체계획보다 훨씬 많은 영역을 포함한다. 주택, 교통, 도시 개발 등의 다른 계획 영역이 점차 사회계획에 통합되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사회적 과제의 계획과 관리는 더 이상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과업이 아니다. 이른바 공공 거버넌스에서는 사회서비스 설계를 위한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 유권자, 기업, 협회, 단체 등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계획 수립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 거버넌스에서의 서비스 공동 생산에 대한 의견도 제시된다. 통합사회계획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혜택에 초점을 맞춘다(Beck, 2012).

과거의 노인돌봄계획이나 노인계획과 달리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노인 돌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Rosenkranz, 2011). 지자체의 업무에는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자기 결정권 및 사회, 정치, 문화 참여 증진이 포함된다(Kruse, 2019). 지자체가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생활 여건에 대한 다층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령자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젊고 활동적인 고령자와 돌봄이 필요한 초고령자의 수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건강, 돌봄, 스포츠, 문화, 주택, 도시 계획 등 가능한 한 많은 영역을 서비스 설계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밖에 경제와 노동시장 또한 고령화 사회의 사회계획에서 고려해야 한다(Schubert, 2019).

4. 지자체 활동 지역으로서의 동네

독일의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에서는 ‘레벤스raum(Lebensräume, 삶의 공간)’과 ‘콰티에(Quartiere, 동네)’라는 용어가 자주 논의된다. 삶의 공간은 일반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장소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공존이 발생하는 물리적 구조(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Freien

Wohlfahrtspflege[BAGFW], 2015).

- 경험과 행동을 위한 공간
- 참여와 돌봄을 위한 공간
- 정치적·행정적 공간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 영향, 활동, 공간 기준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을 경험한다. 따라서 삶의 공간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을 유지하는 장소이다(BAGFW, 2015). 참여 및 돌봄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공간은 교육, 문화, 직업, 스포츠,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문화적 틀이며, 이러한 공간은 사회적 참여, 정치적 결정, 수요 중심의 관리를 통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공간은 사람들이 동네, 학교, 대중을 위한 활동이나 집단에서 자신의 생활 공간을 형성하고 가족을 위해 이러한 공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BAGFW, 2015). 정치적·행정적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공간은 거주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의해 정의되고 공공행정에 따라 명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지역을 세분화하면 명확하게 정의된 지역과 여러 인프라의 특정 수요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적 계획 수립과 관리가 단순해질 수 있다. 도시 안의 전체 관할 지역, 마을, 개별 동네 등이 정치적·행정적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지역이 될 수 있다(BAGFW, 2015).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동네’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다. 이 용어는 자신의 집 주변 공간과 이러한 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동네의 경계가 반드시 거리 이름이나 기타 공식적인 경계일 필요는 없다(Schnur, 2008). 그러나 녹지 공간, 폐쇄된 철도, 주요 도로 같은 지리적 상황에 따라 동네의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류는 매우 주관적이므로 거주자에게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지역에 대해 묻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어느 부분이 동네의 일부로 포함되는지는 주로 해당 지역의 거주자와 거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각자의 삶의 상황, 주기, 양식, 가치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동네 자체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해당 지역의 거주자마다 다른 견해를 지닐 수 있다(Schnur, 2008).

농촌 지역은 상호 연결된 인프라의 크기로 인해 개별 동네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

우가 많다. 그러나 농촌이야말로 도시화 진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위한 혁신적인 지역사회 주택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있다(Wonneberger, 2018). 이를 통해 무너져 가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삶을 위한 동네 지원과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에서 모든 지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면 다세대를 고려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Gründer, 2022).

특히 도시 기반의 여러 지역사회에서 동네를 개발할 때에는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는 수 세대에 걸쳐 지역 인프라 형성에 기여한 이민자 인구가 있다. 1950~1960년대에 독일로 이주한 최초의 초청 노동자들은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되었다. 이 집단의 사람들은 평생 힘든 육체노동을 한 경우가 많기에 현재 다른 인구 집단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여러 의학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이 인구 집단은 빈곤 위험은 높은 반면 평균적으로 정규 교육 수준은 낮기 때문에 정치 및 사회 참여의 기회가 부족하다.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인해 이 집단만이 지니고 있는 특정 수요 또한 동네 프로젝트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및 참여의 불평등은 삶의 공간을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한다(Dubois, Quentin, Mack, Böttcher, & Theege, 2022).

동네 개발에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디지털화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장치를 활용하여 동네의 여가 활동과 통신을 지원하거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네 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이 점점 더 많이 개발되어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Schelisch & Spellerberg, 2017).

5. 나가며

인구 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현재 ‘동네’라는 해결책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특히 생활 환경에 크게 의지하는 고령자를 고려한 해결책이다. 동네는 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사회 제도 안에서 사회적 교류와 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동네는 고령자에게 미래 지향적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수요 평가 초기 단계부터 개념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 공간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범부처 다분야 간(cross-sectional)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역량

연계(예: 주택 및 건강을 의료 기술과 연계)를 통해 혁신적인 돌봄의 개념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자금 조달 구조가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 집단을 더욱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지능화된 지식 네트워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지자체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할 수 있다. 실험적 공간과 모범 시행 사례는 동네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국가 지원이나 재정 삭감을 보완할 수는 없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이며, 시너지 효과와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Beck, A. (2012). Steuerung braucht Lotsen. Strategische Sozialplanung für Freie Träger. *Blätter der Wohlfahrtspflege*, 159, 171–173.
- Blaumeiser, H., Blunck, A., Klie, T., Pfundstein, T., & Wappelshammer, E. (2002). *Handbuch Kommunale Altenplanung: Grundlagen, Prinzipien, Methoden*. Frankfurt am Main: Eigenverlag des Deutschen Vereins für Öffentliche und Private Fürsorge.
-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Freien Wohlfahrtspflege [BAGFW]. (2015). *Der Sozialraum als Ort der Teilhabe – Standortbestimmung der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Freien Wohlfahrtspflege*. Retrieved from https://www.bagfw.de/fileadmin/user_upload/Veroeffentlichungen/Stellungnahmen/2015/BAGFW_Standortbestimmung_Sozialraum_final.pdf
- Bundesregierung. (2017).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publikationen/demografiepolitische-bilanz-der-bundesregierung-731404>
- Destatis. (2022). *Demografischer Wandel*. Retrieved from https://www.destatis.de/DE/Themen/Querschnitt/Demografischer-Wandel/_inhalt.html
- Dubois, M., Quentin, J., Mack, A., Böttcher, B., & Theege, J. (2022). Aufsuchende politische Bildung im Quartier – ein Projektansatz. *Journal für politische Bildung*, 05/2022, 42–51.
- Gründer, R. (2022). Quartier-Machen' auf dem Land. In *Quartiersentwicklung in ländlichen Kommunen*. Edition Centaurus – Perspektiven Sozialer Arbeit in Theorie und Praxis. Springer VS, Wiesbaden. https://doi.org/10.1007/978-3-658-37202-6_4
- Kricheldorf, C., & Oswald, F. (2015). Gelingendes Altern in Sozialraum und Quartier. *Zeitschrift für Gerontologie und Geriatrie*, 48(5), 399–400.
- Kruse, A. (2019). Anforderungen der Gerontologie an die Planung für ältere Menschen. In Schubert, H. (eds.), *Integrierte Sozialplanung für die Versorgung im Alter. Grundlagen, Bausteine, Praxisbeispiele* (pp.19–42). Wiesbaden: Springer VS.
- Landesbüro altengerechte Quartiere. (2020). Definition des Quartiers. Retrieved from <https://www.aqnrw.de/quartier-gestalten/prozessmodul/uebersicht-prozessmodul/definitiondes-quartiers/?schluessel=wie#wie>
- Oswald, F., & Wahl, H-W. (2019). Physical contexts and behavioral aging. I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refore/9780190236557.013.399>
- Preisendörfer, P. (2005). *Organisationssoziologie*.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Rohden, K. S., & Villard, H. J. (2010). Kommunale Alten(hilfe-)planung – Rahmung und Standards. In Aner, K. & Karl, U. (eds.), *Handbuch Soziale Arbeit und Alter* (pp. 51–57).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Rosenkranz, D. (2011). Integrierte Sozialraumplanung als Beteiligungsplattform. *SW Sozialwirtschaft*, Jahrgang 21(2011), 4, 38–39.
- Schelisch, L. & Spellerberg, A. (2017). Potenziale digitaler Vernetzung älterer Menschen im Quartier. In Sinning, H.(eds.), *Altersgerecht wohnen und leben im Quartier – Trends, Anforderungen und Modelle für Stadtplanung und Wohnungswirtschaft*. Stuttgart: Fraunhofer IRB Verlag. <https://doi.org/10.51202/9783816799511>
- Schnur, O. (2008). Quartiersforschung im Überblick: Konzepte, Definitionen und aktuelle Perspektiven. In *Quartiersforschung* (pp.19–54). Zwischen Theorie und Praxis.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 Schubert, H. (ed.) (2019). *Integrierte Sozialplanung für die Versorgung im Alter: Grundlagen, Bausteine, Praxisbeispiele*. Wiesbaden: Springer VS.
- Siebte Altenberichtscommission. (2016). *Sorge und Mitverantwortung in der Kommune – Aufbau und Sicherung zukunftsfähiger Gemeinschaften. Und Stellungnahme der Bundesregierung*. https://www.siebter-altenbericht.de/index.php?elD=tx_securedownloads&p=1&u=0&g=0&t=1524408180&hash=cc35f0e8c0a999eb60042d3eb595bdf3224e976&file=/fileadmin/altenbericht/pdf/Der_Siebte_Altenbericht.pdf
- Vogelpohl, A. (2008). Stadt der Quartiere? Das Place-Konzept und die Idee von urbanen Dörfern. In *Quartiersforschung. Zwischen Theorie und Praxis* (pp. 69–86).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VSOP/Verein für Sozialplanung. (2015). Ein Konzept für Kommunale Pflege- und Altenhilfeplanung. Stellungnahme der Fachgruppe „Alter und Pflege“. https://www.vsop.de/download/dokumente_allgemeine_hinweise/alter_und_pflege/Konzept_zur_kommunalen_Altenhilfeplanung_2015.pdf
- Wahl, H.-W., & Gerstorf, D. (2020). Person-Environment Resources for Aging Well: Environmental Docility and Life Space as Conceptual Pillars for Future Contextual Gerontology. *The Gerontologist*, 60(3), 368–375. <https://doi.org/10.1093/geront/gnaa006>
- Wonneberger, E. (2018). *Neues Wohnen auf dem Land – Demografischer Wandel und gemeinschaftliche Wohnformen im ländlichen Raum*. Wiesbaden: Springer VS. <https://doi.org/10.1007/978-3-658-21363-3>